

경제칼럼/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비축 농지 스마트팜이 물꼬

홍승태 기자 | 승인 2025.06.29 16:22

최현수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 최현수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우리나라 농업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농업·농촌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는 심화되고,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10여 년 전부터 농업계에서는 새로운 해법을 찾고 있었다. 그 답이 바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이다.

정부와 지자체도 이런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스마트 농업법」을 만들고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늘리고 있다. 특히 젊은 농업인들이 스마트 농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충북 지역만 해도 16곳에서 134ha 규모의 공공형 스마트팜이 완공됐거나 건설 중이다.

스마트농업을 더욱 확산시키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스마트팜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공공형 스마트팜을 만들려면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무엇보다 적당한 땅을 구하기가 어렵다.

서남해안의 간척지는 넓은 농지를 확보하기 상대적으로 쉽지만, 충북처럼 내륙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스마트팜을 지을 적당한 부지를 찾기 어려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축 농지'를 활용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비축 농지란 고령, 은퇴 농가 등으로부터 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사업으로 직접 사들인 농지를 말한다. 이 땅은 농업을 하고자 하는 2030세대 등 청년 농업인에게 장기로 임대해 사용하게 한다.

특히 농업을 새로 시작하는 젊은 농업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처음부터 농지를 사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필요할 때 빌려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농업 진입의 문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 주목해 농어촌공사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스마트팜 교육을 마쳤지만, 농지나 시설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 비축 농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한 후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빌려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젊은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정착을 도우며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매년 10여 곳의 스마트팜 시설을 만들어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에는 충북 보은군과 진천군에 2개 지구, 4곳에서 부지면적 약 2ha(6000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새로 구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준비하고 젊은 농업인을 제대로 키우려면 더 많은 요소가 필요하다. 단순히 농산물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가공과 유통까지 연결된 통합적인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어느 정도 집단화된 비축 농지를 적극 활용하여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집단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지은행이 농지를 사들일 때 전략적으로 한곳에 모아 사도록 하여 집단화된 비축 농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농업 거점지역을 만들고 싶은 지자체는 지역 예산을 투입해 국가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협력 모델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우리 농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농업 확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함께 지혜를 모아 실용적인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 때이다.



홍승태 기자 hongst1125@dynews.co.kr